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9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	발의연월일	2019.06.03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심 경 석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국가보훈 지원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정책을 강화하고자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자격(거주기한 폐지) 확대(안 제9조제1항)
- 나. 현행 보훈예우수당 중복지원 제외 사항을 본문에 명문화
(안 제9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9.4.12. ~ 2019.5.1.)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II. 검토 의견

1. 조례 개정의 배경

-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여건에 맞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표1>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지급액과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 규정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됨.

<표 1>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지급액	자치구명
1만원	7개 자치구 (동대문, 중랑,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2만원	10개 자치구 (종로, 용산, 성북, 강북, 도봉, 마포, 강서, 영등포, 동작, 관악)
3만원	5개 자치구 (성동, 광진, 구로, 송파, 강동)
5만원	1개 자치구 (중구)
7만원	2개 자치구 (서초, 강남)

<표 2>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거주기간 비교

거주기간	자치구명
1년 이상	8개 자치구 (종로, 용산, 성동, 성북, 도봉, 금천, 송파, 서초)
3개월 이상	7개 자치구 (광진, 강북, 은평, 마포, 강서, 강동, 중구)
제한 없음	10개 자치구 (동대문, 중랑, 노원, 서대문, 양천, 구로, 동작, 영등포, 관악, 강남)

- 먼저,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은 서초구와 강남구가 7만원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17개 자치구가 2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됨. 또한 보훈예우수당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0개 자치구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서초구를 포함한 8개 자치구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 한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주요 개정 내용

1) 보훈예우수당 지급 관련 거주기간 제한 폐지(안 제9조제1항)

-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함.
-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거주기간 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10개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국가보훈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보훈복지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됨.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관련 수당의 중복지급 방지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 구청장은 서울시로부터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 받는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개 자치구에서 보훈 관련 수당의 중복금지 조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서초구의 경우에는 조례 부칙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령의 기본 체계상 본칙은 자치법규가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이고, 부칙은 본칙에 따르는 시행일, 경과조치 등 부대적(附帶的)인 사항을 정하는 부분임을 감안할 때 보훈 관련 수당의 중복금지 조항은 부칙이 아닌 본칙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표3>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중복금지 규정 운용 비교

구 분	자치구명
본칙	18개 자치구 (종로, 중구, 강북, 은평, 서대문, 금천, 동작, 용산, 광진, 중랑 등)
부칙	4개 자치구 (서초, 관악, 강남, 송파)
명시하지 않음	3개 자치구 (성동, 동대문, 구로)

Ⅲ. 참고자료

1. 관련 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